

강원도

고병원성 시 재발방지 위한 가금농가 교육 실시

강원도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겨울 철새 도래 시기를 맞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재발 방지를 위해 가금농가에 대한 방역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10월 21일 춘천시 농업기술센터를 시작으로 철원, 화천, 양구, 홍천군 등 5개 시·군 50여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시 상시방역대책 추진 방향과 예방대책, 사양관리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효율적인 차단 방역과 소독 요령을 숙지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를 예방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또한 고병원성 시 재발방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농가의 자율 방역 의식인만큼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인제, 축산농가 일제소독

인제군은 중국 구제역 추가발생으로 인한 구제역 방역강화 및 조류 고병원성 시 등 병원균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축산농가 일제소독에 나선다.

인제군에 따르면 2~3명으로 이뤄진 방제단 6개 반을 편성해 한우와 젓소, 돼지, 닭, 오리, 염소를 키우는 축산농가 764곳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20일 일제소독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소독약품과 방역복, 신발, 장갑 등을 지원하고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전농가에 대해서는 공동 방제단을 투입하는 한편 중규모 이상 농

가와 축산 관련 단체에는 자율방역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춘천, 시 특별방역 기간 운영

강원 춘천시는 조류인플루엔자 사전 예방을 위한 특별방역을 실시한다고 지난 10월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특별 방역 기간을 정하고 상황실을 통해 수시로 가금류 질병예찰 활동 및 신고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또 최근 닭과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오는 11월 8일~10일에는 농가별 소독 실시 여부를 일제 점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상황실을 평일 오후 8시까지, 주말은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라며 “소규모 가금류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공동 방제일로 정해 소독 지원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춘천지역의 600여개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가금류는 80만수에 이른다.

경상북도

한·EU FTA, 농가 피해액 최대 663억원

한국과 유럽연합(EU) FTA 타결로 경북지역 양돈·양계 농가와 낙농 농가가 크게 타격받을 전망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한·EU FTA 타결로 경북지역



양돈·양계 농가와 낙농 농가의 피해액은 최대 663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돼지고기 피해 예상액은 FTA 발효 이후 10년차에 최소 162억원에서 최대 539억원에 달했고, 유제품은 15년차에 57억~97억원, 닭고기는 10년차에 27억원에 달했다.

한·EU FTA 타결로 국내 농수산물 생산감소액은 15년차에 2천481억~3천17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농산물 피해액은 2천369억~3천69억원으로 이중 축산물이 9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수산물은 15년차에 112억원으로 추정돼 농산물에 비해 피해 규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생산감소액 중 양돈은 1천55억~1천214억원, 낙농 594억~805억원, 양계 201억~331억원이었다. 쇠고기는 370억~526억원으로, 돼지고기와 닭고기 수입 증가에 따른 수요대체로 간접 피해가 발생할 전망이다.

돼지고기는 최대 25%의 관세율이 10년에 걸쳐 철폐됨에 따라 수입 물량 급증으로 지역 농축산업 분야에 타격을 줄 전망이다. 삼겹살과 치즈 등 낙농제품 수입이 급증하면서 무역적자와 함께 국내 생산기반을 위협할 정도의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유럽산 골뱅이와 냉동넙치와 참치의 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지역 양돈·양계 농가와 낙농 농가의 피해가 불가피함에 따라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지역은 전국 돼지 사육량의 12.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봉화군, 'AI 방역대책 협의회' 개최

봉화군은 지난 10월 20일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위한 '기축방역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충남 예산서 발생한 저병원성 시와 관련 유관기관, 축산단체, 공수의, 방역 실무자 등이 참석해 AI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군은 내년 2월 28일까지 AI 특별 방역대책 기간을 설정해 방역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농가예찰 및 소독강화, 혈청검사 확대 등 강도 높은 차단방역을 할 계획이다.

또 유관기관 및 축산단체와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를 위해 13명의 대책협의회 위원을 선정하고 농업지원과장을 대책 반장으로 비상근무대책반을 편성 운영한다.

매주 수요일을 소독의 날로 정해 축산농가와 관련시설에 대해 집중적 소독을 실시하며, 34개소의 공동 방제단 편성과 소독약품 등은 군에서 무상으로 지원한다.

AI 조기발견과 차단을 위해 20명의 예찰요원을 동원해 관내 닭·오리 사육 농가에 1일 2회 이상 전화예찰활동과 재발 방지를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울산광역시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 강화

충청남도 예산지역 오리농장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7N7)가 발생됨(10. 16)에 따라 울산광역시도 닭, 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방역

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생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고병원성으로 전이 가능한 혈청형으로 닭, 오리 등 사육농가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2003년과 2008년 두 차례 시가 발생한 만큼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닭, 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의 소독과 임상예찰을 현재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리기로 했다.

또 겨울철새 도래시기인 만큼 철새 도래지 방문 또는 철새와의 접촉 후 반드시 신발, 의복 등을 세척해 줄 것과 가급적 야생조류와의 접촉을 차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농장 내 출입하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부득이 출입을 허용 시에는 반드시 소독 실시 후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닭, 오리 등 가금류의 폐사 시 즉시 구·군 및 울산시 농축산과(☎052-229-2933)에 신속히 신고해 질병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전라남도

한·EU FTA, 전남 축산업 2,500억원 피해

한·EU FTA 체결로 전남지역 축산분야에 앞으로 15년 동안 2천5백억원가량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면서 도내 축산업 붕괴가 우려됐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한·EU FTA 체결로 내년 7월부터 FTA가 발표하면 관세가 철폐된 뒤 2015년

차까지 전국적으로 2조 4천5백55억원의 양돈·낙농업 및 축산업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남에서는 연간 167억원씩 모두 2천5백억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됐다.

가축별로 보면 돼지고기는 관세가 철폐된 2010년 차까지 냉동 삼겹살 등의 수입 증가로 전남 양돈농가는 해마다 평균 74억원씩 2015년까지 1천1백5억원의 피해가 발생해 가장 큰 피해가 난 것으로 추정됐다.

EU 냉동 삼겹살 가격은 국산의 60% 정도며, 관세 25%가 없으면 국산의 50%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관세 철폐로 EU 수입산 유제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유업체가 농가별 생산 계약물량을 줄여 15년 차까지 전남도내 낙농농가는 연간 평균 21억원씩의 피해가 발생해 총 315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관세가 낮아지면 덴마크 등으로부터 냉동 닭다리 수입이 증가해 15년 차까지 전남 닭고기는 해마다 평균 22억원씩 생산 감소가 예상돼 모두 33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쇠고기도 관세가 하락하면 15년 차까지 전남 축산농가는 연간 평균 50억원의 피해가 나서 총 7백50억원의 피해가 불가피해 전남 축산농가의 위축이 우려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한·EU FTA 체결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양돈·낙농분야 품목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우수 브랜드 개발을 육성 지원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활용한 친환경 축산물 인증도 확대하고 축산물의 수입육과의 차별화 및 원산지 표시제도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축산업 규모화·기업화로 가격·품질 경쟁력 확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 '1번지' 도전

전라남도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등 축산물시장 개방에 맞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공급을 위해 사육에서부터 판매단계까지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제(HACCP) 지정을 지속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지난 10월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가축사육단계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제 지정대상이 울들어 9월 말 현재 251개 농장으로 최근 3년 사이 21배 이상 급증했다. 연도별로는 2007년 12곳, 2008년 24곳, 2009년 100곳, 2010년 115곳 등이다.

축종별로는 소 121곳, 돼지 75곳, 닭 47곳, 오리 7곳 등이며, 시·군별로는 나주 41곳, 고흥 32곳, 함평 27곳, 장성 19곳 순이다.

HACCP는 가축 사육과 축산물의 원료관리·처리·가공·포장 및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별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제도다. 가축 사육단계는 2006년 돼지를 시작으로 2007년 소, 2008년 닭, 2009년 오리로 점차 확대 시행하고 있다.

HACCP는 안전축산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스템 구축을 최종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치밀한 확인과정을 거쳐 지정하게 된다.

이 같은 세밀한 과정을 거쳐 HACCP 지정을 받은 농가는 높은 수입을 얻는다. 일례로 지난해 12월 HACCP 지정 농가가 된 전남 나주시 봉황면 정준규(57)씨는 (주)녹색계란에 참여해 산란계 3만

마리를 사육하면서 역대소득을 올리고 있다.

도 관계자는 "HACCP는 녹색전남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농가 400곳 이상이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지바이오시스템 등과 1,250억 규모 투자협약

전라남도가 지역 농수축산물의 고부가가치산업화와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해 친환경농수축산물 가공기업과 수도권 기업 유치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기업의 전남 투자가 잇따르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나주시청에서 박준영 도지사와 임성훈 나주시장, 이지바이오시스템 등 5개 기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25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투자협약에 따라 이지바이오시스템(대표이사 지원철)은 자회사인 한국냉장과 함께 나주 일반산단 6만6000㎡의 부지에 2013년까지 725억원을 투자해 닭고기 가공공장을 설치해 하루 32만마리를 가공하게 된다.

투자가 완료되면 고용인원이 1,700명, 연간 매출 규모가 4,5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들 5개 기업의 총 투자규모는 1,250억원, 고용인원은 2,110명으로 투자규모와 고용효과가 커 연관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도권 기업 유치에 나선 결과 이날 현재까지 55개 기업 유치에 성공해 수도권으로부터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남도의 투자환경

개선 노력으로 기입하기 좋은 지역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장성의 오리농장서 저병원성 시 검출

전남 장성의 한 오리농장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돼 해당 농장 오리와 종란이 전량 도살처분 및 폐기처분 됐다.

전남도는 최근 시 상시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도내 오리 사육농장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과정에서 장성의 한 오리농장에서 H7형 저병원성 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검출된 시 바이러스는 인체 감염위험이 전혀 없는 저병원성이며 국내에서는 H7형 시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변이된 사례도 없다.

도는 그러나 고병원성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하게 돼 있는 규정에 따라 해당 농장의 오리 2만 3,410마리를 도살처분하고 종란 2만9,389개를 폐기처분했다.

또 도는 해당 농장과 주변 지역에 대한 소독 등 긴급방역을 하는 한편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농장에 대해 추적조사를 하는 등 추가 방역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사육농가는 닭 53호 227만수, 오리 13호 10만수 등 모두 66농가 237만수다.

이에 순창군은 산림축산과장을 상황실장으로 14개반 39명으로 편성된 가축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질병 예찰활동 등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순창군은 또 읍·면 예찰팀과 조류사육농가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주 1회 전화 및 임상예찰을 실시하며, 읍·면 공동방제단에서 축사소독을 하는 등 소독과 점검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조류농가에게 축사내 발판 소독조 설치, 장화 갈아신기, 농장 출입 통제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 특별대책 기간 중 상황실 운영 및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평일은 밤 8시까지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2명의 근무인원을 배치해 추진상황 보고와 의심가축 신고 시 신속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중국, 몽고, 러시아 등)에 대한 여행자제와 마을방송, 반상회보, 언론보도 등 자체 홍보를 강화하고 현수막 설치를 통해 시 예방에 대한 동참 분위기를 조성에도 행정력을 쏟을 방침이다.

김제시, AI 재발 방지 상시 방역체제 돌입

2008년 전국 최초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던 전북 김제시가 재발방지를 위한 상시 방역체제에 돌입했다.

지난 10월 26일 김제시는 “날씨가 추워지고 철새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시 재발방지를 위한 상시방역대책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상황실 설치 운영을 비롯한 소독·예찰·감독·사전홍보 등에 대한 집중적인 활동을 내년 4월말까지 벌

전라북도

순창군, AI방역에 총력

전북 순창군이 철새 도래시기를 맞아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에 돌입했다.

지난 10월 19일 순창군에 따르면 이 지역 조류

여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초동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 의심축 신고 접수(1588-4060)를 받고 있으며 겨울철새가 도래하는 시기인 10~12월과 통과시기인 3~4월에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임상예찰 활동을 매주 2회 3일 간격으로 펼쳐나가기로 했다.

또 매주 수요일 '일제소독의 날'을 운영, 닭 3,000수 이하, 오리 농가 등 소규모 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소독을 일제히 실시한다.

특히 공공지역과 용지면 등 발생빈도가 높은 취약지역은 방역차 3대를 동원해 매주 2회 이상 소독을 벌이기로 했으며 관내 가금류 사육농가에게 소독약을 확보 공급할 계획이다.

가금 사육농가들이 운반차량 소독과 축사입구 발판소독조 점검, 소독실시 기록부 작성 등 방역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감독 활동과 자율적 차단방역 강화 조치를 위한 교육·홍보 활동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무항생제 인증 축산농가에 출하 장려금

제주시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공급 체계 확립과 FTA 등 수입개방화에 대응키 위해 무항생제로 인증받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물 출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난 10월 26일 밝혔다.

시의 올해 친환경(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가지원사업은 돼지 3농가, 한우 1농가, 양계 12농가, 육계 및 오리 19농가, 젓소 3농가 등 모두 38 농가를 선정, 9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기준은 한 마리당 한우 5만원, 돼지 5천원, 닭·오리 50원, 계란은 한 개당 5원, 우유는 0.5당 5원이다.

시는 앞으로도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가 지원 사업을 통해 친환경축산 실천농가 확대를 유도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청정 제주 친환경(무항생제) 축산물을 육성할 계획이다.

시는 2008년 16농가 2억9천만원, 지난해 24농가에 1억원을 지원했다.

토종닭·오리 부화장 준공

토종닭과 오리 사육농가들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때마다 가금류 반입금지 조치로 어려움을 겪던 경영 어려움이 다소 해결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와 구좌읍 상도리에 설립 추진되는 토종닭과 오리 부화장이 10월 말 각각 준공, 가동될 예정이라고 지난 10월 18일 밝혔다.

사업비 1억8천만원(지방비 1억800만원, 자부담 7천2백만원)이 투입된 부화장은 토종닭 종란 2만5천개, 오리는 3만개 등 월간 5만5천개 입란이 가능한 부화장으로 농가의 경쟁력은 물론 자급률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육계 부화장 2개소와 증계장 1개소를 준공, 도내 유통되는 육계 병아리 30%를 자체 생산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닭고기를 돼지고기에 이은 제2의 수출주력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육계 계열화 사업, 닭고기 일본수출 기반시설 등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농·축산물 수출진흥전략 마련

제주도가 2014년까지 제주산 농·축산물 수출을 1,400억원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4년간 1,511억원을 투자한다.

지난 10월 6일 제주도가 마련한 '농·축산물 수출 진흥전략'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4년까지 수출 인프라 구축에 954억원, 수출사업 지원에 496억원, 해외시장 개척에 61억원 등 모두 1,511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바탕으로 2011년 470억원, 2012년 705억원, 2013년 940억원, 2014년 1,400억원 상당의 제주산 농·축산물을 수출할 계획이다. 2014년의 분야별 수출 목표액은 농산물과 축산물 각 600억원, 가공식품 200억원이다.

일반농업 분야에 824억6천만원을 투자해 지중 열 에너지를 이용한 원예시설 100ha와 수출용 화훼 생산 전문단지 10ha, 채소 수출단지 육묘장 1ha 등을 조성하고, 수출용 화훼 중구 500만구를 지원한다.

감귤 분야에는 477억2천만원을 들여 수출용 감귤 전용 선과장 3개소, 감귤 아이스크림 생산시설 1개소 등을 만들고, 수출감귤 재포장비, 수출 물류비, 수출장려비 등을 지원한다.

또 축산 분야에는 209억7천만원을 투자해 닭고기 일본 수출 기반시설 2개소, 2차 가공품 생산시설 2개소 등을 시설하고, 수출 육가공공장 6개소와 축산물공판장 1개소 시설 개선 등의 사업을 벌인다.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강화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를 위한 특별방역이 추

진된다.

지난 10월 5일 제주시는 내년 2월말까지 제주도내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닭·오리·철새·야생조류 등에 대한 예찰 활동 강화 등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매주 수요일에 실시하는 '일제소독의 날' 추가 운영과 가축사료 반입 등이 이뤄지는 한림항에 상주직원을 배치하고 소독시설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홍보를 실시해 농장 출입차량 및 사람에 대한 통제를 강화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신고체계 구축, 지역 가축방역협의회 운영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인사소식〉

농림수산식품부
2010년 10월 25일자

〈서기관 승진〉

- 소비안전정책과 서기관 김경미
- 동물방역과 기술서기관 조옥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2010년 10월 11일자

〈승진〉

- 질병방역부장 수의연구원 주이석